

데스크시각



장필수 편집부국장·전남본부장

전남 지역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 붐이 일고 있다. 설치 주체는 시·군 등 자치단체들이다. 경쟁적으로 설치에 나서는 것이 가히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뜨겁다. 가장 뜨거운 곳은 목포다. 목포는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완벽한 준비를 위해 두 차례 개통식을 연거푸 끝내 5월초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국내 최장인 해상 케이블카(3.23km)가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에 치우친 전남 관광의 축을 목포 중심의 서남권으로 돌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도와 해남 사이의 바다인 울돌목에도 12월이면 해상 케이블카가 가동된다. 진도군은 올 여름 개장하는 국내 최

케이블카 열풍을 보는 우려의 시선

대 규모의 콘도와 함께 울돌목 케이블카가 한반도 최남단 섬으로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에선 미래에셋이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여수해상케이블카(자산공원-돌산공원)와 연계할 경우 시너지가 클 것이라 판단 때문이다. 케이블카 열풍은 바다뿐만 아니라 산에도 불고 있다. 구례군은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최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 운동에 들어가기로 했고 담양군도 담양호를 가로질러 추월산과 금성산을 잇는 4.2km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후죽순 그러나 수익성은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나선 데는 관광객 유치에 이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불쏘시개는 2014년 개통해 대박을 터뜨린 여수 해상 케이블카였다. 여수 케이블카는 국내 최초 해상 케이블카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여수를 국내 제1의 관광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수 관광객 증가는 케이블카 효과보다는 2012년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도로와 KTX 등 SOC가 확충되고 '여수 밤바다'라는 낭만 도시 이미지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수 관광객 수도 2017년 1508만 명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해 지난해는 1365만 명으로 급감했다. 환경 파괴 논란은 논외로 치더라도 케이블카 설치 경쟁이 우려를 낳는 것은 수익성 때문이다. 대박을 꿈꾸지만 예상치 못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전국에 있는 22개의 케이블카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여수를 비롯해 네 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통영에선 6개 섬을 연결하는 23km의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사천·거제도 해상 케이블카를 개통하거나 계획 중이다. 전국이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나서는 상황에서 목포와 울돌목 등 전남 지역 케이블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케이블카 설치 목적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면 이전 사고의 전철이 필요하다. 단순히 관광 시설물 설치 경쟁에 나설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만의 콘텐츠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

대전 계족산의 황톳길은 그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토 기업이 2006년부터 전국에서 2000여t의 질 좋은 황토를 구매해 돌산이던 계족산에 14.5km의 황톳길을 조성했는데, 매년 5월이면 맨발 축제를 찾는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는다. 주말마다 무료 음악회를 열어 힐링족을 끌어모은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인프라보단 콘텐츠로 승부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화천 산천어 축제와 보령 머드 축제도 지역의 특성을 콘텐츠로 개발해 성공한 사례다. 체험형 축제라는 공통점이 인기 비결인데 두 축제 모두 연간 18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도 20~30만 명에 달한다. 이제 단순 시설물 설치로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시대는 갔다. 초창기에는 반짝 특수를 누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반면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힌 관광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나도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되새겨 볼 시점이다.

/bungy@kwangju.co.kr

은펜칼럼



강대석 시인·행정학 박사

삼월도 막바지에 이른 지난 주말 모처럼 무등산에 올랐다. 아직 꽃샘추위가 여전한데도 중심사 계곡에는 봄맞이 산행 인파로 제법 북적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무등산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것이다. 언제부턴가 TV 뉴스 관련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국민 취미 생활 선호도에서 뉴스 인구가 등산을 앞질렀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주말 전국 유명 산하를 가득 메우는 산행 인구를 감안하면 그런 통계가 별로 믿어지지 않는다. 등산은 조선 시대에도 유산(遊山)이라는 이름으로 선비들 사이에서 많이 행해졌다. 조의제문으로 유명한 김종직은 42세에 지리산 천왕봉을 오른 뒤 '유두류록'(遊頭流錄)을 남겼고, 그의 제자 김일손은 26세에 천왕봉에 오른 뒤 '선비가 태어나서 한 곳에 조롱박처럼 매여 있는 것은 운명이다. 천하를 두루 보고

장불재 '노무현 연설 바위'

서 자신의 소집을 기를 수 없다면, 자기 나라의 산천쯤은 마땅히 탐방해야 할 것이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렇듯 조선 시대에 남겨진 지리산 유람기만 해도 100여 건이 넘고 무등산 유람기도 20여 건에 이른다. 무등산 유람기 중에는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이 쓴 '유서석록'(遊瑞石錄)이 그중에 압권이다. 몇 년 전 재현 행사도 있어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시절 무등산의 면모와 선비들의 산행 모습을 익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고경명은 41세 때인 1574년, 광주 목사인 임훈(林勳)의 초청으로 4박 5일간 무등산을 유람한다. 고경명은 당시 74세였던 임목사의 초청장을 받고 나이 많은 분과의 약속에 늦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 전에 출발하여 4월 20일 약속 장소인 중심사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아침에 취백루에서 임 목사 일행을 만난다. 임 목사의 일행에는 서하당 김성원을 비롯한 일곱 명의 선비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반가움에 아침부터 술을 두어 순배 한 뒤 증각사와 중령을 거쳐 인식대에 올라 인근 엄불암(念佛庵)에서 1박을 했다. 다음날에는 천왕봉과 비로봉, 반야봉을 둘러보고 서석대와 금석사를 거쳐 규봉암 근처의 문수암에서 또 1박을 한다.

그다음 날은 아침에 임 목사의 제안으로 광석대를 주제로 벌주 마시기 경연을 하고 영신 계곡으로 내려와 화순의 적벽과 소쇄원을 거쳐 식영정에 이른 후 다음날 환백당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다. 요즘 같으면 하루 코스 남짓한 거리를 나흘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주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유산(遊山)을 즐긴 것이다. 정치인들 중에는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유난히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고 박원순 시장이나 손학규 대표 등이 유명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특별히 무등산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7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후 다음날인 5월 19일 오전 중심사 입구에서 출발하여 당산나무와 중대리터를 거쳐 장불재에 올랐다. 이날 산행은 1999년 후보 시절 '광주시민이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면 대통령이 되어 반드시 무등산을 오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신록이 우거지기 시작한 무등산에는 쾌청한 날씨와 함께 꽤나 많은 산행객들이 모여 들었다. 필자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불재에 도착하여 한 너럭바위에 올라가 함께한 시민들에게 육성으로 연설을 했다. 인사 말씀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던 연설은 무려 한 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사람 사는 세상을 주창하며 이상과 현실 속에서 고민했던 집권 5년 동안의 경험과 회고를 작성한 듯 광범위한 대대통령의 무등산 첫 산상 연설이었다. "좀 더 멀리 봐 주십시오. 역사란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보면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눈앞의 이익이 이익입니다." 바로 그날 연설의 일부 분으로, '바로 노무현'의 삶과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처음에는 대의를 좇다가도 그 길이 자기에게 손해이거나 눈앞의 이익이 되지 못하면 돌변하여 태도를 바꾸는 것이 세상인심이 아니던가? 지난 주말 오랜만에 장불재에 올라 그 너럭바위를 보면서 그 때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벌써 12년 전이라니 문득 "산천은 의구한데 인절은 간 데 없네"라는 옛 시조가 생각났다. 마침 장불재 안 내관에 예의 산상 연설이 있었던 곳이란 설명이 있어 기억을 새롭게 했다. 그러나 정작 그 바위는 잊고 있었다. 바위 곁에 조그만 이문표라도 세웠으면 좋겠다.

기고

'광주 상생 카드'로 실천하는 지역 사랑 운동



박남연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

광주에서 유통되는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 카드'가 드디어 공식 출시됐다.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직 지역 화폐란 개념이 생소한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지역 화폐 도입은 선택이 아닌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는 경제적 자원이 많지 않고, 입지나 접근성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리하지 않아 지역 자본이라도 외부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통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광주의 돈이 연간 2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유출되는 돈을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하여 지

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광주 상생 카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지역 화폐는 전국적으로 116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출시 준비 중에 있다. 중앙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역 화폐 확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영업자 매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2018년 3700여억 원이었던 발행 규모를 올해는 2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화폐의 형태는 종이형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형 상품권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화폐는 대부분 종이형 상품권을 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카드형 상품권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종이형 상품권은 별도의 가맹점에 등록하여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상품권 발행·환전 등 운영 비용이 발행 규모의 4%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정책 수당 지급과 연계하기 어렵고 단순히 지출 수단으로써의 기능만 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또한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사용이 불편하고 별도의 결제 단말기를 설치와 모바일 시스템 운영에 따른 추가 비

용 등이 발생한다. 광주시는 이러한 지역 화폐 형태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정책 수당과 연계가 쉬워, 캐시백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장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광주 상생 카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광주 지역 거의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통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 상생 카드 사용자와 업소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게 광주 상생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카드를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불 카드 구매시 5% 할인 혜택은 물론 체크 카드 사용자에게 슈퍼, 주유, 이·미용, 전통 시장 등 사용 업종에 따라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챔피언스필드, 패밀리랜드 입장권 할인 등 추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주 상생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광

주은행 영업점,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에서 선택하여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광주 상생 카드를 설계하고 출시했다. 하지만 카드의 장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행정 기관과 지역민, 소상공인 등 시민들이 함께 사용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광주 상생 카드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지역 사랑을 위한 생활 경제 운동 차원에서 적극 사용에 주시길 부탁한다. 행정 기관이나 기업·단체는 각종 포상금, 정책 수당 등 연계 가능한 자금을 광주 상생 카드로 집행해주시고 선물 등의 용도로 무기명 선불 카드 상품권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시민들도 자녀들과 부모님의 용돈 및 일상생활에서의 소비를 광주 상생 카드로 이용하고, 소상공인들은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할 서비스로 보답해주시길 기대한다. 광주 상생 카드가 지역 경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행정 기관, 기업 단체, 시민, 소상공인 등 우리 지역 구성원이 함께 이용에 동참해준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社說

5·18 현안 표류 한국당 몽니는 언제쯤 끝나나

올 들어 처음 열린 임시국회가 폐회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가 처리해야 할 5·18 민주화운동 관련 3대 현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지역민의 기대를 모았던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 '5·18 망언' 의원들 제명이 그것이다. 지난 11일 지각 가동된 3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다음달 5일까지다.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과 이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이번에도 민생 법안과 국회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5·18 관련 현안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18을 모독한 한국당 의원 세 명에 대한 징계는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들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세 명이 전원 사퇴하면서 공전

을 거듭하고 있다. 5·18 등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을 위한 관련법 제정도 한국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법에 규정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한국당이 위원을 뒤늦게 추천한 데다 청와대가 그중 두 명에 대해 자척 미달이라며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이 반발하며 또다시 미루고 있어서다. 이들 현안들이 한 발짝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한국당의 비협조와 어긋장 때문이다. 이는 자당 소속 의원들을 변호하려는 꼼수이거나 진실 규명에 대한 휘방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올해 5·18 39주년 기념식이 의미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방치된 3·1 독립운동 사적지 정비 서둘러야

올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 하지만 그날 일제에 맞서 분연히 일었던 여기저기 역사의 현장이 방치되고 있다. 광주에서 첫 만세 운동이 열렸던 곳에는 안내판 하나 없고, 만세 시위를 논의하고 태극기·격문 등을 제작한 장소에는 쓰레기 더미가 수북하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할 사적지들이 차츰 황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선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겉보기에 그럴듯한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까닭이다. 먼저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에 있는 삼일사(三日祠)로 가 보자. 빗장이 굳게 잠긴 삼일사의 외삼문(外三門)은 오랜 기간 보수를 하지 않은 듯 단청이 벗겨지고 기둥엔 금이 갔다. 이곳은 장성에서 가장 격렬하게 3·1 만세운동을 했던 류상설 등 독립투사 12인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1989년에 건립된 사당이다.

함평 주민들이 만세 시위를 논의하고 태극기·격문 등을 제작한 장소인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에 자리한 '낙영재'(한문 서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5년 복원된 곳에는 안내판 하나 없고, 만세 시위를 논의하고 태극기·격문 등을 제작한 장소에는 쓰레기 더미가 수북하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할 사적지들이 차츰 황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선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겉보기에 그럴듯한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까닭이다. 먼저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에 있는 삼일사(三日祠)로 가 보자. 빗장이 굳게 잠긴 삼일사의 외삼문(外三門)은 오랜 기간 보수를 하지 않은 듯 단청이 벗겨지고 기둥엔 금이 갔다. 이곳은 장성에서 가장 격렬하게 3·1 만세운동을 했던 류상설 등 독립투사 12인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1989년에 건립된 사당이다.

無等鼓

주택 정책, 조금 더 좁혀 보면 아파트 정책은 그야말로 백악이 무효인 듯하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절은 간 데 없네'라는 옛 시조가 생각났다. 마침 장불재 안 내관에 예의 산상 연설이 있었던 곳이란 설명이 있어 기억을 새롭게 했다. 그러나 정작 그 바위는 잊고 있었다. 바위 곁에 조그만 이문표라도 세웠으면 좋겠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 임대 아파트는 턱없이 낮은 주거의 질로 인해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민간 아파트는 앞서 언급한대로 비싸고, 거침없이 가격이 상승해 '그림의 떡'과도 같다.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는 아파트 투자로 얻을 수익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부유층들의 '물욕'을 억제할 수 없다. 광범위한 금융 규제는 오히려 실수요를 막아낼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19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 쏟아 낸 12차례의 정책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미 옴을 대로 오른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아

역발없는 주택정책

파트 가격을 잠시 붙들 때 놓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최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려움이 없더라도 주택 시장을 경기 부양용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듣고 보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보이는 듯하다.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며, 실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면 그만큼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호'가 있었으면 했는데, 많이 아쉬다. /윤현석 기자 chadol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 화 부 220-0661	문 화 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문 화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3	문 화 부 220-0663	기획관리국	227-9600
문 화 부 220-0664	문 화 부 220-0664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문 화 부 220-0642	문 화 부 220-0642	다자언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